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28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0. 10. 30(금) 14:05 ~ 17:58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박경주      위   원  
                  유은선      위   원  
                  이시백      위   원  
                  이원재      위   원  
                  이진희      위   원  
                  이희경      위   원  
                  전고필      위   원  
                  조기숙      위   원  
                  홍태림      위   원

## 1. 성원 보고

### ○박종관 위원장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기존에 종이로 제공하였던 회의자료 대신에 태블릿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글자가 너무 작거나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사용해서 회의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메일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태블릿 회의를 정착시켜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2020년 제4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와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 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안건은 지난 286차 전체회의 당시 의결하였던 ○단체의 보조금 일부 지원 취소의 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비롯하여 총 9건의 보고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성원 여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11인 위원 중에서 정유란 위원을 제외한 10인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보고를 받으셨는데 정유란 위원님은 참석하기가 어려우신가요?

###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위에서 다른 일 때문에 오실 수도 있고 못 오실 수도 있습니다.

## 2. 개 회 선 언

###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 되면 언제라도 말씀주세요.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전차(前次) 위원회 회의결과는 4페이지에 있습니다. 286차 회의에서는 3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1건이 원안의결이 되었고 문예진흥기금 정시공모사업 추진계획(안)과 국제예술공동기금 리서치 공모계획(안) 등 2건은 수정의결 되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이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혹시 전차(前次) 회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4. 의 결 사 항

○박종관 위원장

- 2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845호 2020년 제4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입니다. 이 안건은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예, 제4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 후보단 제한조치(1인) 보고와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내역입니다. 3차 심의위원 후보단과 관련해서는 지난 7월 24일 이행되었고요. 지난 10월 21일 제4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에서 2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0월 21일 총 16인의 위원 중에서 10인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심의·전문가 온라인 등록 신청서 서약서 항목 내용 변경 보고와 심의위원 후보단 제한조치 보고, 제4차 심의위원 후보단 위촉 여부 결정 등입니다. 주요 내용은 심의기준 합의 및 결정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취소 자격기준 충족 여부 논의와 활동 경력 10년 미만이라도 최근 예술 활동이 활발하거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의·전문가 온라인 등록신청서, 서약서 항목에 허위 경력사항 기재에 대한 기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과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1인에 대한 제한조치 내용입니다.

사실 여부를 해당 기관 및 본인에게 확인하였으며 8월 28일 예비정지로 제한조치를 이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 안에 있는 1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심의위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심의위원 해촉) 제8호(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판단되거나 구체적 사유에 대한 심의위원 후보단 활동 제한조치 및 활동정지 기간이 마련될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한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정지에 대한 기준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위원 후보단 중 성희롱·성폭력 관련 수사 및 기소가 없더라도 문제 소지가 있는 경우 해촉 및 활동 정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이것은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제8조 제8호를 적용하였습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결과입니다.

심의위원 후보단 전체 위촉 현황은 4차 24명을 포함하여 총 1,521명입니다. 그리고 4차의 후보단 선정 결과는 문학 2명, 시각 1명, 음악 6명, 연극/뮤지컬 4명, 무용 3명, 전통 예술 2명, 문화일반 6명으로 총 24명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11쪽의 표로 같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지금 공정심의부장 보고를 받으셨는데요. 위원님들 대부분이 후보단 선정 위원이라서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전보고를 받으셨으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안전은 실명이 거론되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지금부터 공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845호 2020년 제4차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위원회 결과는 선정위원회 위원 중에 문제 제기를 받은 위원이 있어서 문제 제기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의결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후보단 선정위원회 행정을 진행하는 것은 보다 투명하고 보다 공정한 문예 진흥을 위한 절차를 집행하고자하는 위원회 전체의 의지입니다. 이렇게 의결하고자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장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제845호 안전은 수정의결이 되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박종관 위원장

- 두 번째 의결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의결안건은 안건번호 제846호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조미숙 공정심의부장이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미숙 공정심의부장

-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사유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의 지원사업 심의위원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위원 위촉·검증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 해촉 사유 및 부적격사유를 정비하고자 제7조 제2항 제3호를 신설하였고 제8조 제8호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9조 품위손상 사유 문구 준용하여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 분리 및 신설입니다.

기존 별지1의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 및 공정심의 서약서 분리와 제목 및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별지1의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를 신설하여 심의위원 수락 시 선행되도록 하고 별지2의 공정심의 서약서의 경우 심의 참여시 공정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참여 동의서 내 심의위원 부적격사유 및 해촉사유, 성희롱·성폭력 혐의로 인한 문제제기 가능성에 대한 확인 문구를 명시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심의위원회 자격 및 선정요건에서 제2항 3호, 제8조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명시하여 성희롱·성폭력 관련 심의위원 부적격기준 신설과 17쪽의 제4항 6호 ‘책임심의위원회’를 ‘전담심의위원회’로 명칭을 현행화 하고자 하며, 제7호 “선정된 심의위원은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를 심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제출의무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제8조 심의위원 해촉과 관련하여 현행은 “품위손상이나”를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 손상이나”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9조 심의 관련자의 의무와 관여금지입니다.

2항에 “별지1의 서식에 의한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 및 공정심의서약서”를 “별지2의 서식에 의한 공정심의 서약서에 서약하며”로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19쪽 별지1의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를 신설하여 심의위원 부적격사유와 해촉 사유 등의 이유가 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됨에 따라 심의위원 자격에 문제 제기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 분리에 따른 제목 및 수정사항으로 내용을 개정하였고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년도 사업의 심의위원으로 다음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한다.”라고 명시한 사항입니다.

21쪽 동그라미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표가 있기 이전까지 심의 참여여부 및 결과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를 “공표 전까지 참여여부 및 심의결과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일체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를 “일체의 관련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서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서약 내용 위반 시”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만일 위반으로 인하여 예술위원회에 대해 재산상 손해나” 이 부분을 “위반으로 인하여 예술위원회에 재산상 손해 및 명예 또는” 이라고 해서 ‘만일’과 ‘대해’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숙지 후에 서명하신 후”를 “숙지한 후에 서명 및”으로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심의 운영규정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심의위원 위촉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규정(개정)의 핵심입니다.

특히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의 경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보다 높은 범위를 규정한 지침에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내부규정을 바꿔서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어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고 자유롭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진작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인데 다소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홍태림 위원

- 개정(안) 중에서 공정심의 서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 내용 위반 시 10년 간 예술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제한을 명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참여 동의서를 보면 여러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예를 들어 성희롱·성폭력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해촉을 하는데 해촉 후에 여러 가지 제한하는 기간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것과 관련된 사항이 생기면 언제까지 제한을 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안 생기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려된 적이 있나요?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저희들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사안들이 한 가지만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빨리 마련되어야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 ○홍태림 위원

- 연말을 목표로 그 기준 마련을 할 수 있나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저희들이 그냥 기간을 정한다고 해서 그 기간에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 해서요. 앞으로 2개월이 남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력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재 위원

-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는데요. 여기 개정(안)을 보시면 8번에 품위손상을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품위손상이나” 이 개정 내용의 취지에는 동의를 하는데 뒤에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이라고 관용적으로 써왔던 문구인데 조금 조정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기숙 위원

-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쉽지가 않은 측면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분야에서 어떤 사람이 성희롱·성폭력을 자행하고 있는지는 아는데요. 이것에 대해 누가 신고도 안 하고 처벌도 안 받고 언론에는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아는데요. 이것에 대해 보고하기도 힘든 경우가 참 많거든요. 사실은 “법적인 재판을 받아야 확인이 된다.”라고 하고 “아직 모른다.”라고 하고 본인들은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쉽지가 않은 문제들입니다. 우리 필드에서는 이런 경우가 제법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도리가 없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도 위원회는 그때마다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 조항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판단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명문화를 시킨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저는 다른 의견이고요. 저는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인데요. “사회적 물의”보다는 서울시 인권조례 같은 경우에는 인권위원 해촉을 보면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보다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보면 그 밖의 사유라고 된 부분의 “중대한 물의”보다는 “위원으로서 부적당한” 이런 정도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그러면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원재 위원

- 예,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이 정도가 우리가 판단하는 레벨과 맞는 것 같은데요. 기존의 “사회적으로 중대한 물의” 라는 것은 해촉 의지가 별로 없는 것이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원재 위원님께서 조항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이원재 위원

- 제 생각에는 앞부분의 밑줄 친 “그 밖의 사유로”까지는 그대로고요.

○박종관 위원장

- 몇 조 몇 호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원재 위원

- 8조 8항에 “그밖에 사유로”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상당한 물의” 부분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라고 바꾸면 저희 취지에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지적하신 것을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성안해 주세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전효관 사무처장

-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품위손상을 빼자는 얘기거든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아니요. “중대한 물의”를 빼자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박종관 위원장

- 예.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판단이라는 용어의 주체가 없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위원회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그 밖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위원회’로 명시하지 않으면 위원장과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지 않나요? 명시적으로 넣으면 위원회가 판단을 해야 하고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저는 그냥 ‘판단’이라는 용어보다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예. 그냥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정리를 하면,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이시백 위원님, ‘부적절’보다는 ‘부적당’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원재 위원

- 예, 인권위원회도 ‘부적당’으로 되어 있어요.

○이시백 위원

-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8조의 취지를 보면 방어적인 게 많아요. 위원의 권한을 상당히 보장해 주려고 만든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촉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명시한 것인데 마지막 8조는 대상이 포괄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규정 8조를 제정한 취지에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8조 8항은 “그 밖의 사유로”라고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 8조 취지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기가 유연하지만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폭넓은 해촉 범주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는 그 문제보다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내용이 있을 때 심의위원을 해촉한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쓴 것 같거든요. 물론 “그 밖의 사유” 이 부분이 그런 내용인지는 모르겠으나 8조에 들어간 내용은 성희롱·성폭력과 관련되어서 심사위원을 해촉하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원재 위원

- 그러니까 오히려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구 수정과 상관없이 관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이것 때문에 살펴보니깐 맨 앞에 길게 썼는데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조항은 다른 곳도 대부분 열어놓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닫아 놓으면 다른 문제가 생길 때 해촉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회의 판단으로 위임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시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면, 심의위원 해촉에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시백 위원

-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박종관 위원장

- 다음과 같이 바꾸겠습니다.  
제8조의 심의위원 해촉에서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문맥이 맞지가 않아요.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그 밖의 사유.” 이것도 문맥이 맞지가 않잖아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이원재 위원

-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경우.”

○박종관 위원장

- 예,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 행위 등으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로 8항을 수정하고 8조의 주문을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 논의를 제외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논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논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21페이지 하단에 “숙지한 후에 서명 및 심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표현을 “숙지한 후 서명하고 심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으면 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자구를 바꾸는 것은 나중에.

○박종관 위원장

- 아니요. 지금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죠. 이것은 규정에 관한 의결인데 나중에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숙지한 후 서명하고 심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로 정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 중에서 제8조의 심의위원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합니다. 그리고 8조 8항의 “성폭력·성희롱 행위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선 위원

- 앞부분을 보다보니까 제7조 4항에 “10년 이상 활동한 자.”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10년이 안 되더라도 활동과 경력을 인정하거든요.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말이 없어요. 실제로 10년이 안 되도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박종관 위원장

- 심의위원 자격 및 선정요건에 10년 제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16페이지 제7조 1항에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은선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5호를 보시면 1호와 4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위원회가 인정한 것인데요. 10년 동안 활동했다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2년 활동한 사람을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 유은선 위원

- 실제로 이번에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도 10년이 안 된 사람도 선정을 했다는 겁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개정된 규정이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 이원재 위원

- 그게 아니라 설명해 주신 것은 7조의 ①-5호를 보면 그것이 안 되는 자도 자격이 동등하다고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항목도 보면 제일 마지막 호에 그 자격의 라이선스가 없어도 동등하다고 인정해 주는 조항이 있으니까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5조의 내용과 배경은 10년이 안 되어도 위원회가 심의위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 이원재 위원

- 안 바뀌도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10년 제한만 걸리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창작조항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어쨌든 심의위원으로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를 열어놓기 위한 조항이니까 옵션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 박종관 위원장

- 현재 개정된 원안이 유효하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8조의 주문을 “해촉할 수 있다.” 그리고 8조 8항을 “성희롱·성폭력 행위로 인한 품위손상이나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한 경우.”로 바꿔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장

- 의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박종관 위원장

- 회의가 조금 두서없기는 합시다만 5분간 쉬겠습니다.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5시 5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박종관 위원장

- 오늘 회의의 보고안건은 ○단체의 이의신청 내용 보고까지 총 9건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제 국무총리실에서 주관하는 총리님과 함께하는 목요대화가 있었습니다. 23차 회의였는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계와의 대화라는 목요대화가 있었고요. 이시백 위원님과 정유란 위원님이 대표하여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총 7인의 현직 예술가들이 총리님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을 이야기했구요. 저는 문체부 2차관과 함께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님께서 저한테도 발언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시백 위원님은 언택트 시대에 문학의 어려움 때문에 창작지원 확대와 우수문예도서 보급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란 위원은 코로나 시대를 빨리 진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관객들을 극장에 다시 오게 하는가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발언기회를 얻어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장이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여러 차례 위원회 논의가 있어서 총리님께 간곡하게 얘기를 드렸고 총리님께서 해 보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배석했던 문체부 2차관도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 보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된다면 7기 위원회 전체에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겠으나 지금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것에 지나지 않아서 조금 답답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중계되는 것을 보시기도 하고 즉석에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사항은 ○단체의 이의신청 내용 보고입니다.

이 내용보고는 국제교류부 황진수 부장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이 보고내용은 ○단체에서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검토와 논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진행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5일 제286차 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사무처에서 ○단체의 선정 경과를 보고드렸고 4인의 위원님들이 현장 발의를 하시어 위원회에서 보조금 결정액 일부 취소 의결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결재가 끝난 이후에 이 내용을 단체에게 통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유선으로 일부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대면으로 의결 과정을 설명 드리고 이의 내용이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놓여 있는데 비공개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286차 위원회 관련 의결(의안 제843호) 제안사유에 대한 일부 수정요청이 있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의 핵심은 단체에서 지원금 부분 취소라는 문화예술위원회 결정이 이번 사건에 대한 위원회의 깊은 고민의 결과를 잘 알고 있으며 겹쳐히 수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단, 여기에서 일부 취소 사유로 의결했던 내용 중에 밀줄이 그어진 부분에 대해서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이것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도의적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교부금 전액을 자진해서 반납하겠다고 민원을 넣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의결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입니다만 제안배경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의 내용이 기존의 내용을 좀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하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4인의 제안배경을 설명해 주신 위원님이 계신데 이진희 위원님이 이번에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희 위원

-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2가지가 있었는데요. 단체 전체가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맥락으로 단체에 소속했던 ○작가가 일으킨 물의라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원신청 시에는 ○작가 작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요청에 대해서는 ○작가가 소속되어 있던 해당 단체의 지원금 회수 결정은 사실관계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문구를 정확하게 “단체가 일으킨 물의”가 아니라 “○작가가 일으킨 사회적 물의” 라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가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요청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의결했던 것의 중점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구에 대해서는 ○작가가 소속된 단체의 회수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문구를 수정하는 정도로 조정하면 될 것 같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 (가)에 대해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예술계에서 공론화된 ○작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이것이 예술계에 미치는 심각한 파장과 영향 등을 고려해 ○작가가 소속하였던 해당 단체에 아래와 같이 처분을

구함.” 이라고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경 위원

- 좋은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하기 전에 실무 쪽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희 위원님이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추가 정리가 필요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정도로 조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원만하게 이의신청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대안으로 이진희 위원님께서 정리하신 대로 “최근 예술계에서 공론화된 ○작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이것이 예술계에 미치는 심각한 파장과 영향 등을 고려해 ○작가가 소속하였던 해당 단체에 아래와 같이 처분을 구함.” 으로 해서 실무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다음 보고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제교류부의 소관 업무라 황진수 부장이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잠깐만요. 제가 접수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접수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단체의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내용으로 접수하고 수정하여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계속해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현황보고를 국제교류부 황진수 부장으로 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 **홍태림 위원**

- 잠깐 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이 굉장히 방대한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보고 오셨기 때문에 35쪽의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사업 쟁점이라고 있잖아요? 그쪽부터 얘기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황진수 국제교류부장**

- 예, 그러면 35쪽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베니스비엔날레가 아시다시피 내년도로 순연된 상황에서 매년 커미셔너의 지원금이 동결되고 있어서 물가·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때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후원 유치 등이 획기적으로 늘고 있지 않아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바입니다. 커미셔너로서 저희가 5년차 일을 맡고 있는데 아무래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회사의 핵심 직무이기 때문에 직무공모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국제교류부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서와 기능 등과 협력해서 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보조금 증액은 꾸준히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도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더불어서 커미셔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아카이빙 역할을 저희 예술기록원이 있기 때문에 고민도 해 보고 더불어서 아르코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미술관과도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미셔너의 간접지원 영역도 조금 더 부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예산이 10억 정도였는데 1억을 상향시켜서 11억 규모로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니스비엔날레의 일이 아니라 국제교류부의 여러 가지 인적 자원이나 예산 속에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37페이지와 38페이지는 국제교류 방향성에서 베니스비엔날레는 저희 국제교류 플랫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8페이지 표는 개선방향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보조금이 6억에서 계속해서 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후원금입니다.  
사실 후원금은 예술감독의 역량도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산증액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실 예산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어쨌든 저희 부서도 그렇고 저희 예술위원회도 그렇고 커미셔너로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직무공모제를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 홍보역량입니다. 홍보 같은 경우에도 부서 혼자 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부서의 일이라고 보기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이 사업을 만들어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국제교류부는 예술감독을 선발하고 전략을 수립하며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고요. 예술기록원은 아카이빙 작업을 중점적으로 맡아주고 미술관운영부에서는 베니스비엔날레와 연계된 기획프로그램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문화예술후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업들 중심으로 민간후원을 유치할 수 있다면 후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예술부가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베니스비엔날레뿐만 아니라 한국 시각예술이 성장하고 국내의 다양한 비엔날레 등과 네트워크 연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베니스비엔날레는 단순한 전시로 보기 보다는 국제교류 플랫폼을 확장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비엔날레와 연계하고 베니스비엔날레의 병행전시라든지..... 문체부와 협의 중인 사항이기는 한데요. 건축가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로테르담 비엔날레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물어봐 주시고 의견을 서로 말씀해 주십시오.

#### ○홍태림 위원

-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보고안건은 제가 국제교류부에 요청을 드려서 보고해 달라고 한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위원으로 들어와서 임기를 시작하고 이것저것 살펴보다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 베니스비엔날레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핵심 사업이고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와 백남준 작가가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만들어낸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술위의 말할 수 없는 핵심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5년 전부터 커미셔너를 맡고 있고 예술감독이 들어오시면 커미셔너는 예술위지만 예술감독이 들어와서 6억을 받아서 나머지 5억~6억은 편당을 받느라 모든 시간을 할애하시더라고요. 베니스비엔날레에 가서 상을 받으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정작 여기에서 활동하시는 예술감독과 예술가들에 대한 예산이 동결된 상태에서 정채하고 있는 부분이 고민이 돼서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2021년 예산도 원래는 10억인데 10억 6,000만 원이고 2022년에는 저희가 12억 정도를 잡아놓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2022년도 예산을 올해 짤 때는 통상 증액이 되지 않았더니 2억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크게 2가지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문제와 두 번째는 인력문제입니다.

최근에 국제교류부가 원래 8인 정도로 운영되다가 과장급 인사가 있으면서 과장으로 계신 분이 공연 부서 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과장으로 일을 하시던 분이 사실상 예술위에서 커미셔너로 일을 하시던 분인데 이 분이 나가시니까 베니스비엔날레를 담당하

시는 직원은 과장 1인과 주임 1인입니다. 그런데 주임 1인이 도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도 결국은 베니스비엔날레에 대해서 예술위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력문제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저희가 잘 운영해야 되니까 단기적으로는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직무공모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술위 핵심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교류부, 기록원, 미술관운영부, 후원센터, 시각예술부가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협력 구조가 있더라도 베니스비엔날레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최소 4인 정도 구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고사항으로 올려주시기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 박종관 위원장

- 홍태림 위원님이 보고를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하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 홍태림 위원

- 바로 내부 직무공모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 전효관 사무처장

- 최근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예술감독이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장기적으로 베니스비엔날레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사업혁신TF에서는 미술관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해서, 왜냐하면 미술관에는 큐레이터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문제는 저희가 사실 예술창작기금 등이 거의 동결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실제로 예술공간운영사업에서 예산 증액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공연예술센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동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전반적으로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는 다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이희경 위원

- 지금 미술관으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홍태림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가요?

#### ○ 홍태림 위원

- 미술관으로 옮기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교류부장이 말을 한 것처럼 여러 부서가 협력하는 구조가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어디로 이관한다는 문제보다는 이것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술관으로 가도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는 인력 구조가 아님

니다. 지금 인력으로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데 베니스비엔날레를 그냥 넘기면 절대로 소화를 못 합니다.

#### ○이희경 위원

- 이 사업은 저희가 만든 사업보다는 국가적으로 만든 사업을 저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넘겨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니스비엔날레가 여전히 유효한 사업이라면 어떻게든 미술계의 중지를 모아서 이 사업에 힘을 신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굉장히 많은 사업의 하나로 생각하면 조직의 입장에서는 행정편의나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아마 홍태림 위원님이 이것을 제안하신 것은 그런 사안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제안인 것 같고요. 저희가 각 장르별로 대표 사업이 있지만 미술에서 베니스비엔날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그게 여전히 유효한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미술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 예술위원회에서 이런 대표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합의가 되어야 지금 말씀하신 요청들에 대해 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나온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논의를 더 진전시키기에는 그런 부분의 본질적인 접근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상과 전담체계라든가 예산의 문제 등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체계 그리고 부서의 독창성의 문제,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융복합 문제 등을 어떻게 통합 장르적으로 부서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나오면서 처장이 거기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하는 정도거든요. 다만, 추가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 쪽에서는 이 논의를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요?

####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지금 베니스비엔날레는 혁신TF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베니스비엔날레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정도입니다. 베니스비엔날레 자체를 바라보는 것과 위원회 전체 사업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서 깊이 있는 논의까지는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제기한 부분에 대해 최소한 사무처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요. 베니스비엔날레의 전체적인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홍태림 위원

- 내부 직무공모제를 지금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가능성 여부는 열려 있는 것인데요. 가능하면 직원들이 자기 직무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직무공모제를 활성화 시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홍태림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이 있나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어떤 분야를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베니스비엔날레도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홍태림 위원

- 시기를 여쭙는 것인데요. 할 의지는 있으신 거잖아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홍태림 위원

- 그러면 조만간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12월 정도까지 조직체계 개편이나 사업체계 개편 등을 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인력운영 관련해서 직무공모제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니스비엔날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수요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는 안을 성안시킬 생각입니다.

○홍태림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번 보고도 요청에 의한 보고입니다만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2022년 창작지원사업의 새로운 환경을 맞이해서 보다 새로운 창작지원사업을 펼치자는 현장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요청되어 왔는데요. 이른바 아르코비전2030에도 정말 현장에 적합한 지원제도를 펼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이 제도를 크게 개혁하거나 변화

시키는데 늘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의 역동적인 힘이 뒷받침되는 창작지원사업 운영 방향과 관련한 기획조정부의 야심찬 기획을 저희들이 진행해서 어느 정도 위원회에 보고를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획조정부에서 이 안을 직접 담당했던 서유미 과장이 올라와서 직접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창작지원사업 운영 방향(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서유미 기획조정부 과장

-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음으로 보고를 드리게 되어 상당히 떨리는 상태입니다.

사업혁신TF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분야별 분과회의와 현장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각 분야별 사업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영역 발굴을 위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10월과 11월에는 분과 회의를 통한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창작지원 사업 개선 방향을 확정하고 2022년도 사업구조와 세부 사업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문체부와 의견 협의를 위해서 2022년도 예술창작지원사업(안)을 최종(안)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사업혁신TF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각 분야별로 논의한 결과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발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주요 논의 키워드는 정책과 현장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방안, 예술 환경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작품 위주의 지원에서 사람지원으로의 전환, 지속 가능한 예술활동을 위한 예술의 영역 확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에 정책혁신소위원회와 코로나19대응TF 합동 회의가 있었는데 사업혁신TF의 고민에 대해서 정책혁신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과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람·과정 중심의 지원을 전환할 때 전체적인 구조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의견과 지원대상자 선정 시 인맥이나 다른 요소에 의해 선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현재 과정 지원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과정은 사전준비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활동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작품 중심의 지원구조로 인해서 성과 결과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사업구조를 혁신해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술활동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현장의 이해가 쉬운 사업 구조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너무 많은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그리고 현장의 파트너로서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서 각 사업을 운영할 때 예술인운영단을 제안해 주셨고요. 현재 우리의 사업이 적정 규모로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사업들 대부분이 사전지원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이 심의, 교부, 정산을 하기에는 사무처와 현장 모두 피로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사후지원’이나 ‘포상금’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주셨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은 부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디지털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 공간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42쪽입니다.

그간 활동을 통해서 도출한 사업구조 개선 방향(안)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 부분은 아

니고요.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2022년도 창작지원 사업 구조 개선(안)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술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술현장과 사무처 직원들 모두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소통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과 의제를 적시에 파악하고 사업 운영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장의 당면 과제 및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현장에서 직접 제안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열린 형태의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워크숍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장과의 정기적인 만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사무처 담당자가 현장 속으로 찾아가 소통하고 함께 문제 해결하는 업무 추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요소는 거둬내고 현장 속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효율화가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예술현장이 이해가 쉬운 사업 구조입니다.

복잡한 사업 구조를 단순하게 바꿔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각 사업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공지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기창작지원은 현재 다년간 창작지원으로 하고 있는데 단순지원의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창작지원은 다년간 지원이라는 오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창작지원은 단체의 자생력 기반 구축을 위한 중기 전략 지원으로 창작산실과 구별할 수 있도록 차별화 하고 사업명칭도 목적에 따라 변경할 예정입니다.

사업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원회 공모사업이 55개에 달합니다. 유사한 여러 사업을 통합 운영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르별로 확대된 소규모 비평활성화 사업은 묶어서 규모를 확대하고, 비평활성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작산실 사업 구조는 실험활동지원, 대본공모, 지속연주지원, 비평, 올해의 신작 등 여러 사업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복잡해 보이고 설명이 어렵습니다. 공연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브랜드를 고려해서 현장에서 통용되는 신작발표지원 사업으로 하는 대신 연극, 뮤지컬 중심의 작품 발표 방식을 각 장르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43쪽입니다.

문학, 시각예술 창작산실도 창작산실 명칭을 써서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기초사업까지 내려가는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창작산실 같은 경우 풀어서 내내역사업까지만 구조를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현장과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행정용어를 지속적으로 알기 쉽게 개선하고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과 처음으로 만나는 부분은 지원 신청 공고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딱딱한 행정용어로 채워진 문서 형태가 아니라 시각화와 알기 쉬운 용어로 현장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이 어렵게 느끼는 지원신청서 작성과 정산 등 서류 업무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 등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여가려고 합니다.

‘협력’기반의 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각 지역별 광역재단은 물론이고 기초문화재단까지 생겨나고 있고 유사 지원기관도 많이 생겨나면서 각 기관별로 비슷한 사업을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는데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과 소규모 지원 사업들을 공동으로 운영해서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민간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는 사업 영역을 발굴하고 운영 권한을 이관해서 현장 참여형 거버넌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는 단년도 1회성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운영 방식이 중심이었는데요. 운영하는 동안 충분히 성장하고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장기 활동지원 중심으로 대폭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지원을 받는 동안 예술가와 단체가 전폭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금 규모도 현실화 하려고 합니다. 지원을 받는 규모에 비해서 신청, 교부, 정산, 성과보고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과다하게 느껴져서 신청단체가 포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원규모 현실화를 통해서 예술위 사업만큼은 당연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패의 두려움 없이 마음껏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과정 혹은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분야별로 규모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가진 사업이 공연예술창작실험활동지원인데요. 분야별로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신설하고 지원 예산과 규모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술가의 활동 영역 및 터전 확장입니다.

현장의 우수한 작품을 지원하는 것이 중점이라면 앞으로는 우수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관점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람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부분인데요. 예술인력육성사업을 크게 키워 예술가들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일거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예술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더욱 확장하고자 합니다.

예술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지원 사업 영역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고령화, 코로나로 인한 단절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 예술적·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예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우호적인 공감대를 형성되어야 지원의 당위성과 규모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술활동과 형식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예술 형태를 응원하며 미래의 두꺼운 예술 향유층 확보를 위한 사업들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입니다.

정산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사후지원방식, 공공구매방식, 포상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인증제와 같은 간접 지원 방식으로도 현장의 활동을 도울 수 있고요. 투자처를 연결해 준다거나 공간 매입을 할 때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방식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도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류심사를 하는 방식에서 관객들이 대표로 심의를 하는 방식을 도입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심의는 향유자의 입장에서 좋은 작품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관점을 현장과 공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업혁신TF에서 고민하고 있는 2022년도 창작지원사업 운영 방향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업혁신TF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정책소위원회에서 같은 주제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보고된 내용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시고 논의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해 주실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참고로 오늘 서유미 과장이 직접 발표를 하도록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혁신 TF는 실무자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위원님들과 함께 예술지원방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 예술위원회 내부의 새로운 주체들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만든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말씀을 너무 짧게 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피들이 역동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지원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이 직접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눴고요. 아주 심도 깊은 논의도 했다는 것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 자꾸 저한테 이런 것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무슨 성과를 낸 것이냐?”라고 묻기 시작한 것인데요. “어떤 성과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지원 사업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혁신적인 개혁이 있었는가를 현장에서 준엄하게 묻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뭔가 대답할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창작지원 사업의 큰 방향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이것을 토대로 더 많은 내용들을 위원님들과 공유해 나갈 것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검토를 한번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보고자료를 마련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금 더 튼튼한 지원사업을 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은선 위원

- 이것은 이 내용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 현장을 배려한 서비스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공모 마감시간을 자정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신나는 예술여행은 11월 2일 자정으로 되어 있어요. 월요일 밤 12시까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예.

○유은선 위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날자는 10월 8일로 되어 있는데 몇 시부터 열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개가 모두 정시공모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오늘 자정까지고 하나는 11월 2일까지니까 헷갈려 합니다. 11월 2일까지 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원래는 다 같이 받는 것인데요. 올해 신나는 예술여행이 동영상을 파일첨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 한꺼번에 몰리면 전부 다 다운이 될 수 있어서 그것만 급하게 연장을 했습니다.

○유은선 위원

- 연장을 할 경우에는 부각이 되도록 안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주 문학시각예술본부장

- 안내를 할 때 신나는 예술여행만 그 밑에다가 ※표시를 하고 각 사업마다 언제까지 접수하는 것은 안내책자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유은선 위원

- 제가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술인들이 예술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하면서 살다보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정시공모 또한 11월 2일 자정까지 했으면 좋지 않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강윤주 위원

-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예술가의 활동 영역 및 터전 확장에서 예술인력육성 사업도 대폭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예술일자리 신규 개척 및 지원이라고 쓰신 부분이 어떤 내용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45쪽에 있습니다.

○서유미 기획조정부 과장

- 사실 연수단원지원 등의 사업은 있지만 예술가들이 지역에서 본인의 활동을 기반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지원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지역에서 본인들의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새로운 일자리 모형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을 신규로 제안하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술인 파견 지원과는 조금 다른 것이네요.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예술인 일자리 사업이 갖는 한계가, 그러니까 개인의 욕구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과 조금은 겹돌면서 공급형 사업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저희 예술인 일자리 사업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평가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면 그런 점들이 있어서요. 말하자면 개인의 욕구에 기반을 하되 그것이 사회적 정무를 발굴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취업 부분 등을 나눠서 고민하려고 예술연수원에서 기획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은 국가에서 발표하는 일자리 사업들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최근 “뉴딜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지점이 뭘까?” 지역사업과 관련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새로운 교육과 일자리 사업의 체계를 짜보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현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 인터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는 무엇일까?” 기관이나 단체 중심에서 파견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자생성을 갖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보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강윤주 위원

- 제가 최근에 문체부의 다른 사업 때문에 지역을 돌아다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럴 때 “젠더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표정이 일관되게 ‘뜨악’ 하면서 쳐다보시는지. 제가 젠더 관련해서는 정말 지역의 격차가 크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성평등예술지원 소위원회에서는 사실 지난 2년간 계속해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예술위와 같은 상징적인 지원기관에서 여성주의적 가치가 담겨진 작품에 대한 카테고리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스웨덴 같이 성평등 관점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그런 지원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물론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여성주의적 가치를 얘기하면 당연히 “남성주의적 가치가 있는 작품은 왜 지원을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TF고 젊은 피가 만들고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하는 지원사업에 여성주의적 가치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원할 수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원재 위원

-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필드에 있는 분들이 해 주시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세대 문제만이 아니라 보고를 하거나 토론을 하는 방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사업TF 관련해서는 저희 정책 소위원회에도 2번 오셔서 소통해 주시고 고민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서 좋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사업혁신TF 과장님께도 워크숍 때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런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한 축에서 우리 장르나 사업체계 등을 논의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다른 게 많거든요. 제 판단은 아무리 우리가 위원회를 혁신해도 위원회 기금 재원 상황에서 사업체계를 바꿔서 현장과 소통하고 사회에 드러낼 수 있는 한계가 너무나 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 변화를 만드는 모멘텀이라든지 프로세스를 만드는 노력들을 위원회가 하지 않으면 사실 한계가 명확하

다고 보거든요. 여기에도 박스 표시가 되어 있지만 지난번 워크숍 때도 많은 정책소위원회 위원님들이 해 주신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당장 정책적 접근성으로 개선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예술이랑 같이 성장하거나 함께 가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 주체들에게 예술위의 정책이나 사업 방향이 예측 가능하냐?” 저는 그런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의 생태계라는 것이 설명되고 우리는 감시자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거나 실제 주체들이죠. 정책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는 흐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설계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것들도 매우 익숙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예술가들이 봤을 때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뭐냐 하면 “나와 해당되는 지원 사업이 뭐야?”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전반적으로 예술위의 재원운영 전략이나 방향성이 설명되거나 토론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론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장르나 이해당사자의 이야기만 계속 듣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주신 설명이나 노력들에 대해 많이 동의를 하는데 이것은 좀 다르게 설계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홈페이지나 다른 플랫폼에도 계속해서 설명되고 그게 현장소통 소위원회나 정책 소위원회, 장르별 예술 생태계들과 만나는 것을 설계해 보는 작업들이 병행되어서 예술가들이 우리의 셀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다원예술의 30대 초반 예술가인데 무슨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성폭력으로 시작해서 사회적 경제 등과 연결되는 것까지도 설명될 수 있는..... 그런데 제가 본 바로는 위원회 안에도 그런 것을 논의하는 구조나 흐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자인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위원회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들로부터 정체성이나 비전이 되지 않겠나 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사업혁신이라는 것을 사업 단위 예산들로 볼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고 보여주는 방식의 혁신 트랙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것은 약간이라도 대답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1차적으로는 사무처가 현장과 만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직원들도 TF를 운영하면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이 내용들은 우리가 소위가 있는데요. 지금 현장소통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만날 계획으로 있고요. 정책혁신부에서는 연말 소위와 함께 할 수 있는 정책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이원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나 세미나 차원을 넘어서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전달 체계 자체를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파트너십 구조로 바꿀 것이냐? 사실 사업혁신TF를 보면서 2021년도 초에 문화부나 기재부, 현장 등과 예산이나 구조 등을 협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파트너십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은 이것과는 조금 별도의 디자인과 프로세스 설

제가 필요한 일인데요. 사실 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이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면 민간 파트너십과 권한 등을 어떻게 분산을 시키느냐인데 그때 우리가 정책혁신 소위를 할 때 사업혁신은 아래로부터 작업을 하면 정책혁신 소위는 위로부터 작업을 해서 만나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오늘은 가는 길을 크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원재 위원

- 조금만 부연을 하면,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도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이죠. 예술위가 그때 시기에 위원들의 관심사를 떠나서 예술위를 둘러싼 구성요소들이 있잖아요? 아트트리도 계속 디자인이 되고 진행돼서 성과가 나오면 예술위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아까 국제 교류도 베니스비엔날레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예술위원회로서의 국제교류 전략이 뭐냐?” 이것도 사실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지만 우리가 느리게 가더라도 쉼여가는 구도로 보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구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예술위의 외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술계 원로들과는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위원들과 친한 원로들을 만나서 밥을 같이 먹는 게 아니고요. “예술가 원로들이 갖고 있는 지혜나 사회적 영향 등이 어떻게 하면 예술위와 파트너십으로 갈 수 있나?” 이런 것은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을..... 그래서 그런 전략을 세우면 7기 위원회에서 대단한 것을 안 하더라도 그 그림 안에서 진행된다면 예술위가 갖고 있는 아트카운실로서 사회적 영향력이나 역할들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제안입니다. 그리고 그게 공모사업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설명되어야 예술가들이 “너희는 뭐하냐?” 이런 얘기를 안 하지는 않겠지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수자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위원회도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만 다양한 소수자와 관련된 권리부분도 설계가 되고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 위원들이 원래 자기가 했던 장르나 관심사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예술가치 확장성을 위한 역할 등을 설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있어야 예산 싸움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이진희 위원

-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시면 예술가의 삶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사업 영역 확대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요. 사실 작품의 결과, 작품으로써 증명하거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들어내는 과정을 어떻게 예술가의 노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가치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치가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으면 정책 안에서 하나의 문건이라는 방식으로써 지원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예술가들의 노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 증빙하는 방식으로 많이 경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술위의 도전이나 새로운 혁신이 없다면 기존의 임금시장 안에서 노동이라고 규정되는 것들 하에서 평가되는 방식이 여전히 쓰여 진다면 활동 영역이나 터전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은 이전과 다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라는 형태로 문화예술활동, 권익옹호활동, 인식개선활동

등 눈에 보이지 않고 가치적인 것을 생산하는 것을 노동으로 보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혀 다른 영역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인건비를 어떻게 지불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여전히 정책적으로 제도 안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적인 시도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안의 경직성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지? 현장 요구에 의한 변화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 사항을 보고받고 토론을 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안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위원님들까지는 공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는데 더 많은 정보를 위원님들께 빨리 제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안이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씀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지적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 ○박경주 위원

- 저는 일단 사업혁신TF를 처음에 추진할 때 과정에서 약간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이 뭐냐 하면, 보고안건으로 그냥 짜신 내용이 올라와 있었고 보고안건에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논의가 되지 않았고 갑자기 분과별로 모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2022년도 사업을 고민하면서 약간 혼돈된 것이 뭐냐 하면, 파이를 나누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파이를 만들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분야별로 예술과 관련해서 최근 10~20년을 고민해 오신 분들인데요. 저희와의 시작점이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저한테 떨어진 다원예술 파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 저는 그게 어떤 파인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사업을 혁신하고 싶으면 파이를 바꿔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이 분야별로 계속해서 뭉기만 하고 있고요. 저는 중간에 몇 번 여쭙봤어요. “저희 위원님들끼리 한번 모여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 얘기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원예술도 마찬가지로 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이원재 위원님과 이진희 위원님도 계속 그쪽 분야를 하셨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소통이 없고 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자기 파이를 만들어 가는 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것은 일의 체계에 있어 “정말 사업혁신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을 부분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사무처에서 한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관점을 많이 바꾸셔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무처에서도 전체회의가 있었던 것을 제가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이렇게 문서로 보고받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자주 볼 수가 없다면 “연구가 돼서 이렇게 논의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이 만나는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답답함이 많이 사라질 것 같아요.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후 논의 시스템과 관련해서 계획된 것이 있으면 다 말씀하세요. 정책 소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할 것이고요. 지금 논의 중인 현장소통 소위원회도 공유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TF는 후속 모임이 있지 않겠어요? TF 후속 모임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이야기하셔서 저는 이 부분이 여기까지 검토되고 정리되어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완전히 결론을 내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8~9월에는 현장별로 소통을 했었고 10월에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책혁신 소위와 얘기를 하고 그것을 합쳐서 11월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내는 과정으로 정리가 될 것인데요. 지금 박경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조금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박경주 위원

- 예, 시작점이 없다는 게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사업혁신TF를 하겠다고 했을 때 2번 보고안건으로 올라오고 나서 저는 저희 위원들끼리라도 전체적으로 모여서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분과별로 모인 지가 몇 개월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작점과 중간점, 끝점 정도는 잡아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11월에 사무처(안)이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었을 때 워크숍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게 41쪽에 설계는 되어 있는 것인데요. 정확하게 문제 제기를 하신 대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어서 조금 더 튼튼한 정책지원사업 운영 방향(안)이 나오도록 사무처에서 설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2022년도 창작지원사업 운영 방향(안)에 관한 보고를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아르크혁신TF 혁신의제 추진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 ○류재수 기획조정부장

- 아르코혁신TF 혁신의제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르코혁신TF 운영 개요는 민간위원 6명, 예술위 위원 4명, 사무처 4명, 간사 1명이 참여해서 자체회의를 거쳐 2018년 12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혁신의제는 23개가 채택되었고요. 조직분야 10개와 사업분야 13개가 도출되었습니다.

49페이지에 과제 및 주요내용을 보시면 조직분야 혁신의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이라는 혁신의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운법 제외’ 등으로 해서 50쪽을 보시면 사업분야 혁신의제 13가지가 있는데요. 11번에 ‘예술위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 예술인의 의견을 반영’이라는 의제부터 52쪽의 23번 ‘예술의 가치 확산’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 쪽에 주요 추진경과라고 해서 지금까지 추진경과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고하는 이유는 홍태림 위원님께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이라는 이슈를 들었는데 이 이후에 문체부의 입장은 “어렵다.” 정부 보조금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힘들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가예술위원회 전환’과 관련한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에 「혁신의제 1」 국가예술위원회로 확대·개편 개요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그 당시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국가예술위원회로 설정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제안이 되었는데요. 1번을 보시면 행정기관 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위원회화 하고 두 번째로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로 제안이 된 바가 있습니다. 소속은 대통령 소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국가예술위원회 혹은 국가문화예술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설치근거는 국가(문화)예술진흥법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가(문화)예술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설치목적과 주요기능, 전체위원회구성, 소위원회 및 지원심의위원회, 사무처구성, 장·단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같음 하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행정기관위원회와 중앙행정기관위원회를 비교를 했습니다.

행정기관위원회는 2가지입니다.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가 있었고요. 자문위원회는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는 지금 4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위원회의 개념을 보면 행정기관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요건에 보시면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업무가 기간을 두고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 대통령 소속의 개인정보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의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자

문을 하는 위원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향하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의 세 번째를 보시면 중앙행정기관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되어 있는 위원회로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위원회는 조직 자체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요. 중앙정부 조직도에 완전히 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위원회는 안이고 저희가 했던 부분은 행정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위원회에는 거의 대부분이 심의나 규제 업무를 하는 기관들이 많고 지금 문체부 산하의 행정위원회도 있는 것들이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등이 있고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라는 부분이 사무처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일부의 심의·의결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한다는 의제를 던진 상태입니다만, 문체부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문체부의 조직을 하나 떼는 부분이고 이것은 더 큰 레벨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들 때문에 어렵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태림 위원

- 블랙리스트 사건이 드러난 지가 4년째인데요. 예술위원회 차원에서는 2018년 12월에 아르코혁신TF 결과보고를 한 이후에 2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물론 진행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도 호선제도 하고 위원들의 임기 2년이 3년으로 위원장과 맞춰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6월, 7월에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자율운영협약서 같은 것들이 작년 5월부터 파행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같은 경우에는 조직혁신의 1호 의제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이후에 저희가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논의가 더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위원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진행된 것들도 있지만 방치되거나 파행된 것들이 벌써부터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관람료지원사업 관련해서 기재부나 문체부로부터 저희한테 떨어졌던 사업 같은 것입니다. 물론 선의를 가지고 만들어진 사업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이것을 제안한 이들이 위원들한테 찾아와서 설명을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거수기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것을 문체부가 지휘 감독을 한다는 것이 구조적인 맹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 지정사업 같은 경우도 흔히 '쪽지예산'이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대응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국회 발화이트리스트 아닙니까? 예술위가 민간 협치기구로 발족을 했는데 구조적으로 전혀 그런 성격을 가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자율운영협약서' 이것은 5월에 파행된 이유를 다 아실 겁니다. '자율'이라는 내용을 빼라고 했습니다. 벌써 저희는 구조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르코혁신TF 추진현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은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6월부터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가와 단체의 분들을 수시로 만나서 의견도 들었고요. 그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감사님, 사무처 모두에 대

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열심히 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거친 결과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2가지였습니다.

2018년 12월에 저희가 경과보고를 했어요. 아르코혁신TF 추진현황입니다. 그 중에서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에 관한 논의는 못했는데요. 제가 얘기를 하자는 것은 국가예술위원회 전환을 놓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위가 어떻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과 얘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갖자는 겁니다. 결론은 국가예술위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금보다 훨씬 더 가질 수 있으면 다른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예술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예술현장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다른 대안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입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자율운영협약서를 어떻게 저희가 진행해 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무처 안에서, 그러니까 문체부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술현장과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술현장과 얘기를 하지 않고 저희끼리 얘기해서 정돈을 해 버린다? 혹시 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술현장의 공유가 모여 있는 자율운영협약서를 저희가 문체부와 체결했을 때 예술현장도 더 의미 있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말쯤이라도 2018년 12월 이와 관련해서 경과보고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것을 소위원회 차원이 아니라 위원회 차원에서 예술현장과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요청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있었고 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전용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예술위와 관련된 블랙리스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죠. 반성하는 부분이 있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말했던 행동과 일치되는 대응을 하는 기조를 잡아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대응하는 과정 자체에 대해 공유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위원들이 공유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송 과정에서 공유 받을 수 없는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유를 받은 적이 없어요. 5개월 지나니까 행정 절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판이나 소송 관련해서 새로 나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반성하는 의미를 잘 담아서 잘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주 위원

- 일단 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해결 과정 속에 7기 위원회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사무처에서 저희를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홍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추후라도 경과보고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혁신 소위를 할 때도 민간위원으로 오신

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예술계 현장에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지켜본 사람이라면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건별로 “자율운영협약서로 하자.”, “국가예술위원회로 하자.”라는 게 아니라 국가예술위원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얻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문건에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 되어 있는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국가예술위원회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요약을 하자면 문제 제기를 흥 위원님께서 하셨습디만, 국가예술위원회 전환 문제와 문체부 자율운영협약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송과 관련한 문제가 중요하니 위원과의 공유 통로를 열어달라는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일단 즉시 대안을 낼 수 있는 것은 대안을 내겠습니다.

국가예술위원회 전환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르코혁신TF는 저희가 보통 23개 혁신의체로 부르는 것이고요. 하나씩 관리가 되어서 얼마나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어떤 효과를 냈는지에 대해서 현장에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한 절차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르코혁신TF 23개 과제 안에서 지금 표면에 올라와 있는 국가예술위원회 문제와 문체부 자율협약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송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해야 하는 문제들은 소위원회를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위원회 차원에서 다룰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회경 위원

- 그 결정을 내리실 때 의견을 추가하자면, 지금 흥태림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7기가 출범할 때 7월이나 8월 정도에 현장과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된 것을 토론회하는 자리를 갖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답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지만 논의를 시작하는 자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정확하게 예술계에 드러내 보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돈되지 않아서 그런 자리를 못 갖는다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것들을 솔직하게 밝히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자는 정도의 현장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이 위원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사실 7기 위원회 초기에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 연말에 기획해서 하자고 하면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추진

사항이 없는 것도 있어요. 사실 문화예술위원회를 훨씬 뛰어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만들어서 하자고 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후속 계획을 잘 잡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 ○강윤주 위원

- 제가 2년이 되었네요. 제가 2년 동안 느낀 것은 정말 작은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품이 드는지에 대해서 느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포기하고 살았구나.”, “내가 핸들링하기 어려운 쪽으로 가면 포기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구나.” 그런 것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차원에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저희가 아무리 문체부 등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도 그쪽에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저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안을 집중적으로 골라서 그것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고 그것대로 계속해서 나가는, 예를 들어 코로나 등의 TF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가는 구체적인 설계도가 없이는 이 문제는 매년 홍태림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시고 우리는 다시 반성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푸시를 함으로써 나갈 수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를 이 안에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자. 이것을 위해서는 또 다른 TF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의 정교한 계획과 실질적인 실행이 없으면 이런 일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원재 위원

- 저는 이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많은 사람이라서요. 일단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한편으로는 사무처에 얘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가 움직여야 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술위 위원회가 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한 것 같고요. 최근에 감사님도 오셨고 위원장님도 그런 활동을 많이 해 주시니까 더 힘을 붙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면 아르코 내부적으로 약속했던 것들, 정책 소위 같은 경우 혁신과제를 점검하는 것과 혁신과제 말고 아르코 비전을 만든 것도 있잖아요. 그 2개를 같이 놓고 스크린 하면서 올해 안에 정책제안을 포함해서 논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런 형태의 스크린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기하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르코 내부의 정책 스크린 수준이 아니라 원래 제기되었던 쟁점이나 문제들은 현재성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적 상황에서 7기 위원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했고 소위도 구조화가 되었을 때 현장과 어떻게 협력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냐? 그리고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예술위원회는 그 자체로 논의할 게 많은 사항이고 정책적, 행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논의들을 현장과 하는 것은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소통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님과 사무처장님 그리고 위원들이 소

통을 했었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율성이 보장된 협약 부분도 꺼내서 공론화 과정을 가져갈 것인지는 현장 주체들을 초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TF나 정책혁신TF, 현장 소위, 사업혁신 소위 등은 연말 정도에 의견이 모아지는 게 생길 것 같아서요. 현장 소위와 공론화를 하면서 진행시키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필요하면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장님과 상의해서 TF나 준비단을 만들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진행시킬 수 있는 추진동력을 만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강윤주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다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아르크혁신안 23개를 읽어버리거나 소홀히 한 적도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의 가닥을 잘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정책 소위에서 국가예술위원회 문제라든가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자율운영협약 관련해서 문제. 2가지 사항을 다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보고를 하면서 나왔던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 추가 보고는 다음 위원회 때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태림 위원

- 두 번째 요청을 드린 것은 보고의 필요성도 있지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저희가 원래 갖고 있는 기초를 잘 반응하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전효관 사무처장

- 오늘 홍태림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약간 논의가 되려면 행정적인 형식을 만드는 후속조치는 빨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처장님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정책 소위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이원재 위원

- 그러면 정책 소위에서 정책적인 것은 진행시키고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홍태림 위원과 위원님들께 요청을 해서 추가 논의테이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위원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든 참여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요원 감사**

- 소송 관련 문제가 있잖아요? 소송 관련 문제도 사무처에서 정리하는 것을 넘어서는 원칙적인 문제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사무처에서 정리해서 뭔가를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행정적인 요식행위와 이행과제밖에 안 될 것입니다. 방금 홍태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블랙리스트 관련 소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회 내에서 위원님들의 판단과 근거를 만들고 사무처에 타당한 방식으로 내려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음 회의에서 보고를 받을 때 감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안은 접수를 받도록 하고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30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은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는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께서 하겠습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우리 위원회 자산인 뉴서울컨트리클럽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얘기가 있어서 상황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뉴서울컨트리클럽은 1987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골프장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골프장이고 회원이 2,000명입니다. 정회원이 1,992명, 특별회원이 8명입니다. 코스는 36홀이고 토지면적은 84만평입니다. 이 골프장은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고 한국문화진흥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과 저희 사무처장님께서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58페이지의 운영 현황을 보시면 회원가격이 평일에는 6만 원이고 주말은 6만 5,000원 인데요. 2020년 올해의 예산은 300억 정도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기준으로 하면 43억 원의 기금 조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59페이지를 보시면 한해에 17만 명이 오고 있고요. 평균적으로 50억 내외의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골프장을 통해서 1,381억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60페이지부터는 뉴서울골프장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른 매각을 추진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999년도에 1차 ‘공공부문 경영혁신 계획’에 따라서 매각 방침이 통보되었고 2008년도에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의해서 계속해서 통보가 되고 현재까지도 매각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것이 기재부의 방침입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매각 가격이 대략 3,000억 이라고 보시면 되고 회원 2,000명이 있는데 2,000명에 대한 회원가격이 2,600억입니다. 그러면 400억이 남고 매각하는데 100억 정도에 대한 세금이 나갑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남는 게 300억밖에 안 됩니다. 300억을 연 이자 2.5%로 치면 연간 7억 원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 매각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 국회 문체위에서도 그런 입장으로 매각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에 보면 특별회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서 골프장에 있는 클럽하우스를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80억 정도의 예산을 특별회원 방식으로 해서 1인당 10억 원씩 해서 8명에 대한 특별회원으로 조달했습니다.

정회원 같은 경우에는 평일 기준으로 6만 원 정도인데 특별회원은 6만 5,000원씩이고 정회원은 월 5번 정도를 치면 특별회원은 월 20회입니다. 그리고 정회원은 2억 원 정도의 회원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모집할 때는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회원가격이 뜰립니다. 월 20회를 이용할 수가 있고 예약시기를 정회원은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데 특별회원은 35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 우선적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날짜는 특별회원이 다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회원들의 불만들이 많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에 조사하고 5년간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대표님께서 특별회원에 대한 것이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축소하는 안을 만들어서 협의를 했고 특별회원 측은 당연히 반발을 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정회원 입장에서도 특별회원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국정감사 이후에 위원장님께서도 골프장에 방문하셨고 다음 주에 정회원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현재 기관의 입장은 저희들이 특별회원 문제를 해소하려면 80억을 줘야 하는데요. 그것을 해소시키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요. 지금으로는 특별회원에 대한 자격조건을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법률적으로 쟁점사항이라서 지켜봐야 되고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태림 위원

- 골프장은 특별회원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재무관리부장님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사회 구조 안에서 사무처장님만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된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국감 때 이미 보고를 드렸죠. 저희가 평상시 관리 감독권과 감사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감사 권한을 통해서..... 이게 아무리 골프장이라고 하더라도 공공기관이거든요. 독립적 공공기관인데 골프장이라도 공공기관 같지 않은 형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관리 권한을 강화해서 문제가 없는 공공기관으로 바뀌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국감 이전에 이사회와 관련해서 이사회를 강화하는 것은 저희가 단독주주이기 때문에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논의 중입니다. 사실 국감 이전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한 말씀을 더 드리면 26일 국정감사가 끝났는데요. 제가 27일 골프장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다양한 골프장 내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저도 꼭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에 있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따로 한 번씩 직접 만나서 대안을 찾으려고 합니다. 침해하게 주장하는 바가 엮여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홍태림 위원**

-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 전에 특별회원을 모집하겠다고 방향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회원을 모집하겠다는 방향을 세웠을 때 위원회에서 검토를 받나요? 저희가 당시에 그것을 허락한 것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그것은 실무 쪽에서 답을 하시죠.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특별회원 모집에 관해서는 아마 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태림 위원**

- 저희가 의결을 한 것이죠?

**○전효관 사무처장**

- 아마 의결권한에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보고는 되었을 것입니다.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회원권 자체는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아마 위원회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송시경 공연예술본부장

- 아마 문체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

○전고필 위원

- 회원권과 관련된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술위원회 회의 자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것을 매각한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결정 주체들이 문화부라면 이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원재 위원이나 지나 머리씨는 잘 두르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전고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장의 힘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고필 위원

- 국가예술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현 정부의 정책들을 수립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도 문화부에서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서 계속 물어붙이기는 했지만 결국 결정을 문화부가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뒤엎을 것인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현재의 네트워크만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고 앞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진짜 현장 사람들이 와서 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같이 힘을 결집해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계속 회의를 하는 것은 힘만 소진되고 피로감만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나 위원회의 주요 기능이 문예진흥기금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골프장에 관한 보고를 마땅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신 대로 특별히 큰 변수가 생긴다고 하면 당연히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야 하고 나아가 현장 예술계의 힘을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고필 위원

- 아까 혁신TF에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행정과 소통 역량을 강화한다면 그 소통이 어느 곳에 중점이 되어야 하는가? 사실 어제부터 문화부에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가지고 4군데 지역을 탐방하면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발표의 내용이라는 것을 ○재단의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문화부가 시늉만 하고 있고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도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단정을 지어서 얘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면..... 지금 저희가 “야경국가로 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소위에 안 들어가서 같이 적응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현장에 있는 분들과 만나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감사실장

- 골프장 매각 결정은 과거 진흥원 시절에 이사회에서 결정된 부분이고요. 위원회 자산에 대한 매각 결정은 진흥원시절에 매각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이런 부분이 정해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자산의 매각 등은 당연히 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죠.

○전고필 위원

- 그렇다면 진흥원 시절에 매각 결정을 내렸다면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매각 결정을 다시 번복할 수는 있습니까?

○박두현 경영전략본부장

- 그때도 매각을 안 하려고 상당히 끌었습니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큰 방향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결이 된 것입니다.

○남요원 감사

- 절차적으로 하면 2000년도에 진흥원에서 매각 결정을 한 것이고요.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에서 공기업과 관련해서 선진화 방안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매각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의 소관 업무라서 아직까지 이 정책이 수정되거나 부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박두현 본부장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2015년도에 국회 교문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입니다. 국회 권고조항에 의하면 “매각이 실익이 없다.”, “매각이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주요한 축을 맡고 있는 뉴서울CC를 매각하는 것은 국회 차원에서 반대한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주주이기는 하나 곤란이 지점이 뭐냐 하면 뉴서울CC가 공공기관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인의 성격이고 공공기관이고 동시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각과 관련해서 우리 권한 안에 있지만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관리는 기재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차적인 것이고요. 언제든지 매각이 시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저희가 전망할 때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에 넘겨주려고 한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우리 내부의 문제라서 문체부장관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이전을 못해 준다고 합니다. 예술인들과

직접적 관계가 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최대 매각 금액으로 6,000억 원 정도로 보고 있어요. 6,000억 원 이라고 해도 아까 보고한 것처럼 다 떨어내면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올 수 있는 것은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 수준이고요. 기재부의 방침이 뭐냐 하면 “너희들 문예진흥기금을 헐어서 써라.” 이렇게 보면 실제로 2~3년 안에 모두 소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분명히 맞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문체부에서 뉴서울CC의 대주주 권한의 범위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판단되면 위원장님이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고필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2019년 5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직접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고요. 지금 감사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62쪽에서 63쪽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보고를 받으시고요. 지금 저희가 추가로 보고를 받아야 할 것이 제3~5차 현장소통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4~5차 정책혁신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제5~7차 성평등 예술지원 소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코로나19대응TF 4~5차 회의 결과보고를 받아야 되는데요. 소위원회 활동을 위원회에서 보고받겠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건으로 보고를 받으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 혹시 직접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쉽지만 문건으로 받기로 하고 차기회의 일정을 잡겠습니다.

(회의 일정 조정)

○박종관 위원장

- 긴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모든 보고사항에 대해서 접수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폐 회 선 언**

○박종관 위원장

- 2개의 의결안건과 9개의 보고안건까지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 덕분에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마무리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8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58분 회의종료)

